

## 당사자는 모르는 쪽방촌 공공임대주택 개발

## “35년 생활터전 한순간에 뺏기나...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

## 📌 쪽방촌 전문록

## ① ‘월세 18만원’ 서울역 동자동

정부 ‘2·4 대책’ 동자동 개발 논란  
입주민 90% 월세사는 생활수급자  
“개발되는지 모르는 주민 대다수”

곳곳에 개발반대 현수막 내걸어  
“구청에 입장전달... 행정소송 진행”

서울역 인근에 있는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가 개발 여부를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 계획에 따라 현금청산 위기에 내몰린 쪽방촌 토지·건물 소유주들은 결사반대 입장을 밝힌 반면 쪽방촌에 거주하는 600명의 세입자들은 개발 소식조차 모르고 있었다. 일부 세입자들만이 개발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힐 뿐이었다.

## ◆입주민90% 쪽방촌 세입자, 개발소식 몰라

지난 24일 오후에 방문한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은 서울역 맞은편 KD B생명 빌딩 뒤쪽에 위치했다.

동자동 쪽방촌 일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노숙인 혹은 세입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제한하고 있었다. 주변을 돌아다니는 쪽방촌 세입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해도 꺼리는 눈치였다. 익명을 요청한 A씨

정부의 공공주택 정비사업 발표 후 서울역 인근에 있는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쪽방촌 일대 건물주들은 현금청산 문제를 놓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주택공급이 절실한 쪽방촌 거주민은 침묵을 지

키고 있다.

서울에 있는 쪽방촌을 현장 취재하며 이곳 주민들이 처한 상황을 듣고 부동산 약자를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정부가 공공주택 정비사업을 발표한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의 모습. 정부는 이 일대 241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는 “쪽방촌이 개발되는 지도 모르는 이들이 많다”며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쪽방촌 일대는 여인숙을 운영하는 세입자들이 많다. 현장 답사 중 여인숙을 하는 B씨에게 개발과 관련한 세입자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장사도 되지 않는다”며 “쪽방촌 입주민 대부분은 월세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개발 혜택은 크게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B씨의 말대로 입주민의 90%는 월세를 지불하고 사는 생활수급자들이다. 나머지 10%는 쪽방촌 건물주다. 이들은 월 17만~18만원의 월세를 내며 살아

고 있다. 정부가 쪽방촌 거주자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이들에게는 관련 정보가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이들이 주택을 공급받아 월세를 지불할 수 있을 지 의문이었다. 주택 공급보다는 쪽방촌 거주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더 시급해 보였다.

## ◆후암특계1구역, 결사반대 입장

정부는 지난 5일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공개했지만 해당 구역 건물·토지주들에게 사전 통보 없



후암특계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에서 내 건 개발반대 현수막.

/정연우 기자

이 사업을 발표하고 밀어붙이면서 소유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개발에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강제수용에 따라 현금청산을 당하고 양도소득세까지 물게 될 수 있어서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이 일대 4만7000㎡에 공공주택지구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1450가구, 민간 분양 960가구 등 총 241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사업시행자다.

쪽방촌 일대를 답사하며 개발 반대 현수막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쪽방촌 소유주로 구성된 후암특계1구역(동자) 준비추진위원회에서 내건 현수막이

었다. 현장에서 만난 오정자 후암특계1구역 준비추진위원장은 “현재 용산구청에 반대 입장을 전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주민들의 입장을 모아 지난 19일 국토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법원에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26일에는 청와대로 가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며 “개발 반대 발표가 나올 때까지 시위를 지속할 예정이며 쪽방촌 입주민들과의 상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쪽방촌 소유주 C씨는 “지난 1985년 이곳으로 이사해 35년 넘게 동자동에 살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생활터전을 빼앗기게 생겼다”라며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후암특계 1구역으로 지정됐던 동자동 일대는 지난해 5월 지구단위 도시계획기간이 만료되면서 서울특별시와 용산구청 등의 새로운 용역수주에 의거해 재정비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토지 및 건물주들은 모든 개별 개발행위를 중지하고 2021년 연말에 발표되기로 한 용역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구지정 여부는 공시 전 공개될 경우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되는 중범죄에 해당된다”며 “오해가 있는 부분은 대화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 오늘부터 코로나19 AZ백신 접종 시작

요양병원·보건소 총 549곳에 배송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 첫 투약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루 앞둔 25일 서울 성동구 보건소에 도착한 AZ백신이 백신 전용 냉장고에 들어가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다. 2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으로 K-방역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일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출하돼 의약품 전문 물류센터인 지트리비엔티 물류센터에 도착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약 25만회분은 25일 오전 5시 50분부터 전국 요양병원과 보건소 등으로 배송을 시작했다. 냉장유통차량 56대가 이동해, 전국 257개 보건소, 292개 요양병원으로 이송했다.

전일 물류센터 이송과정에서 제주로 배송되던 일부 백신 수송 용기 온도가 적정 온도(2~8도)를 벗어나는 일이 발생했다. 온도를 이탈한 백신들은 전량 회수되고, 대체 차량이 투입되며 배송은 무사히 이루어졌다. 정부는 추후 회수한 백신 폐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배송이 완료된 백신들은 26일부터는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작된다. 당국은 1호 접종자는 특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음날인 27일부터는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병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된다.

방역당국은 26일부터 시작되는 전국 백신 접종 인원, 이상반응 신고 현황 등을 매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정경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접종일 다음날인 27일부터 누적, 일일 접종현황과 전국·지역별 접종인원, 이상반응 신고 현황 등 국민이 궁금한 사항을 누리집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다”며 “백신의 공급량 확정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매월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K-방역 시즌2’로 만들어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세경 기자 selee@

## 내수 부진... 올 성장률 전망치 3%대 유지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0.5% 동결  
“국내경제 회복세 완만할 것 예상”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기존(3.0%)대로 유지됐다. 국내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것이라 예상과 달리 내수 부진이 발목을 잡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도 아직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소폭 상향 조정했다. 다만 여전히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지 않은 만큼 당분간 통화정책 완화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현재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금통위원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한은은 지난해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로 낮췄으며, 이후 이달까지 모두 여섯 번째 동결이다.

금통위는 “국내경제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상황과 그간 정책대응의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자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 가

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에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성장률 전망치도 바뀌지 않았다. 한은은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3.0%, 내년 2.5%로 유지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소비 회복 속도가 더딘 점을 반영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금통위 역시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니 회복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i@

## SK, 3년내 국내 수소사업 생산기지 건설

## 》1면 ‘대기업 앞다퉀 투자...’서 계속

특히 SK그룹은 수소를 생산부터 유통까지하는 밸류체인 시장에 진입하면서 수소 시대에 대비했다. 지난 1월 미국 플러그파워 지분 약 10%를 인수해 최대 주주로 올라선 데 이어, 25일 아시아 수소 시장 진출을 선언하며 공동 사업을 본격화했다.

SK는 플러그파워와 합작법인 ‘아시아JV’를 설립하고, 2023년까지 국내에 연료전지와 수전해 설비 등 수소 사업 핵심 설비 생산 기지를 건설해 아시아 전역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국에서는 국영 전력회사와 상용차 기업과 협업체 수소 생산과 연료전지 공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수소가 친환경적이지 않

다고 지적한다. 천연가스를 분해하는 방식이라 전기를 사용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탄소가 배출된다는 이유다. 이같은 수소를 부생수소, 그레이 수소라 부른다. 때문에 에너지 업계는 수소도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우선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를 따로 포집해 대기 오염을 최소화하는 ‘블루 수소’를 추진 중이며, 궁극적으로는 친환경 에너지로 물을 분해해 만드는 ‘그린 수소’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욱 기자 juk@